

공 개



의안번호	제 324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9. 29. (제 17 차)

의
결
사
항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9. 29.

1. 의결주문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2019.7.1.~2019.7.12. 기간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은행법」 등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방해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및 제2항, (舊)「은행법」(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의5 및 제4항 제5호
-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 관련) 2.버 및 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다. 관계부서 협의

- 제22차 제재심의위원회(2021.6.17.) 심의필
- 제16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1.9.3.) 심의필

<별지>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 기관에 대한 조치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 과태료 1억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은행법」 등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업무를 방해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은행법」(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2. 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 직원에 대한 조치

- ●●●● : 과태료 2,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은행법」 등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업무를 방해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은행법」(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4항 제5호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2. 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2. 조치사유








가.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은행법」(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및 제4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은행의 업무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제이피모간은행”)은 2019.6.28.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삭제,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방해하였음

- 2019.6.28. 15시 40분경 금융감독원 검사반(이하 “검사반”)이  * 여부 등의 확인을 목적으로 위 은행의  거래 유무,  거래별 실제 영업담당자 내역, 동 영업담당자의 실제 실적 및 해당 실적에 대한 보상 내역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업 등)를 인가 없이 수행하고 거래 체결은 ●●●●● 증권 ■■지점에서 수행하는 방식의 영업행위

위 은행의   사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 은행 서울지점 건물 2층 딜링룸 안에 있는  부 총괄담당  본부장 및 동 부서 소속  차장의 PC를 자료 확보 및 자료 조작 방지 등을 위해 봉인 후 5층 검사장으로 옮기도록 제이피모간은행  준법감시인에게 요청하였으나,

* 2018.3.19. △△△△△△가 실시한 ■■■■■ 입찰에서 ▲▲▲가 입찰금리를 제시하고, 입찰종료 후 관련 정보를 ○○○○○증권 ▼▼법인을 통해 ○○○○○증권 ■■지점(이하 “○○○○○○증권”)으로 전달하여 ○○○○○증권이 △△△△△△와 ■■■■■ 거래를 체결토록 한 사례

** 가 관리하는 은행내 PC에서 2015년 제이피모간은행을 방문한 
 증권 지역본부 직원이 은행직원에게 한국내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간 2013·14년중 상호 교차기장 거래(cross deal) 현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증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및 은행 
 발행 증권을 대량 판매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메신저 파일이 발견되어 한국내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간   사실이 강하게 의심되었음

●●● 차장은 15시 50분경 검사반에 당시 진행 중인 거래의 종결을 이유로 본인 PC의 봉인 연기를 요청하고 검사반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종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15시 50분 ~ 16시 10분경 본인 PC 내 일부 파일 및 폴더를 제이피모간은행 전산시스템내 부서 공유폴더로 이동하여 봉인 대상 PC에서 은닉하거나 원본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 ●●●는 ○○○○○○증권의 Revenue(성과배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염려되어 검사반에 2019.6.28. 18시경까지 PC 사용을 요청한 후 15시 50분~16시 10분경 관련 3개 폴더를 공유폴더(▽▽▽▽▽▽▽ 폴더)로 이동시키고, 1~2개 폴더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의 공동영업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파일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고, 이후 동일자 18시~19시 검사반 직원과의 면담 기회가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 은닉 사실을 검사반에 알리지 않았음

위 은행의 ■■■■ ◇◇◇◇ 관련 거래실적 및 보상 등 영업행위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 및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를 방해하였음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은행 〇〇〇〇지점에 요청하여 파견받은 자료복원 전문인력이 2019.7.2.~7.4. 기간 중 포렌식 절차를 거쳐 삭제자료 복원을 시도한 결과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〇〇〇〇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수익(Revenue) 합계 자료 등 일부 파일(98개)은 복원되었으나, ●●●가 보유하고 있었던 15개 이상의 파일 및 폴더가 복원되지 않음

- 또한, 2019.6.28. 오후 7시 30분경 ●●● 차장이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직상급자인 ◆◆◆ 본부장 및 △△부 ▲▲▲ 수석부장에게 보고하고, 오후 9시 10분경 지점장 ■■■에게 최종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이피모간은행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까지 검사장에 상주하고 있던 검사반에게 동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차례(2019.6.28. 및 6.29.)에 걸쳐 ▽▽ 지역본부와 대책회의를 실시한 후 2019.7.1. 오전 11시경에야 검사반에게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알림으로써

검사반이 PC 봉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검사 관련 파일이 삭제된 후 파일 일부*(98개)가 복구되어 확인하기까지 6일 가량이 소요되었고 일부 파일 및 폴더(총 15개 이상)는 원본이 영구 삭제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검사관련 주요 증빙에 대한 확인 및 보존조치 등을 적시에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하였음

*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수익(Revenue) 합계 자료, 고객별 ■■■■■ 관련 자료 등

관계 법규

□ 은행법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舊)은행법(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된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같은 조 제5항 제5호로 변경되었음

□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 머. (생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버.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5	10,000
서.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5호	2,000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삭 제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3) 삭 제
- (4) 삭 제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삭제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6	02-3145-7205